

일본의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및 리서치 파크 지원제도 사례 조사

- 허문구 연구위원(지역발전연구센터)
- 최윤기 연구위원(연구조정실)

I. 출장개요

1. 출장자 : 허문구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
2. 출장지역: 일본 Osaka, Kobe(Hyogo), Kyoto
3. 출장기간: 2012년 9월 25일 ~ 9월 28일(3박 4일)
4. 출장 목적:
 -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발전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, 해외 주요국의 혁신클러스터와의 비교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.
 -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단지, 창원, 구미 단지 등의 노후화에 기인하고 있음.

- 따라서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주요 성장거점으로서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임.
-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일본의 ‘공업단지’ 재정비 및 지원제도에 관한 전문가 및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 공무원 인터뷰, 기업실태 현지조사
 - 더불어 최근의 한일 경제 특징과 일본기업의 한국투자 현황, 한일 무역의 특징적 요소 등을 파악
 - 한국의 외국인전용 산업단지의 일본기업 입주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병행
 - 일본의 리서치 파크 지원제도를 조사

5. 주요 일정 및 방문기관

【주요 일정표】

일시	일정
09-25(화)	(오전) 김포공항 → 간사이국제공항 이동 (오후) 주오사카한국총영사관 방문
09-26(수)	(오전) 오사카 →코베 이동 효고현청 산업입지실 방문 (오후) 간세이가쿠인대학 이토 교수 면담 코베 → 오사카 이동
09-27(목)	(오전) 오사카 → 교토 이동 교토시청 산업진흥실 방문 (오후) 교토 → 오사카 이동 오사카부립대 와타누키 교수 면담
09-28(금)	(오전) (주)다이로쿠 공업단지 입주기업 면담 (오후) 간사이국제공항 → 김포공항 이동

II. 방문기관별 면담내역

1. 주오사카한국영사관

□ 방문일시 : 9. 25일(화) 15:00~16:30

□ 면담자 : 남궁환 경제담당 영사

□ 주요 면담내용

○ 최근의 한·일 경제협력과 일본기업의 한국 투자 현황

- 일본의 대(對)한국 투자액은 1965년에 5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23.0억 달러로 확대되어 외국인투자로서는 2위 투자국으로 부상
- 양국 간 총 무역액도 1965년 2.2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1,080억 달러로 급증하여, 일본은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 3위국, 수입 2위국의 무역 파트너
- 금융 분야에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진 결과, 투자 자유화 증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03년에 ‘한일투자협정’이 발효되어 한일 양국민은 상대국 투자 시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투자활동 가능
- 또한 양국 금융시스템의 단기유동성을 개선하고 한일 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에 130억 달러 규모의 ‘한일 통화스와프협정’이 체결되었으며, 2012년에는 700억 달러로 규모가 확대되어 양국의 외환 유동성을 둘러싼 불안감은 대부분 해소
- 이러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최근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이 매우

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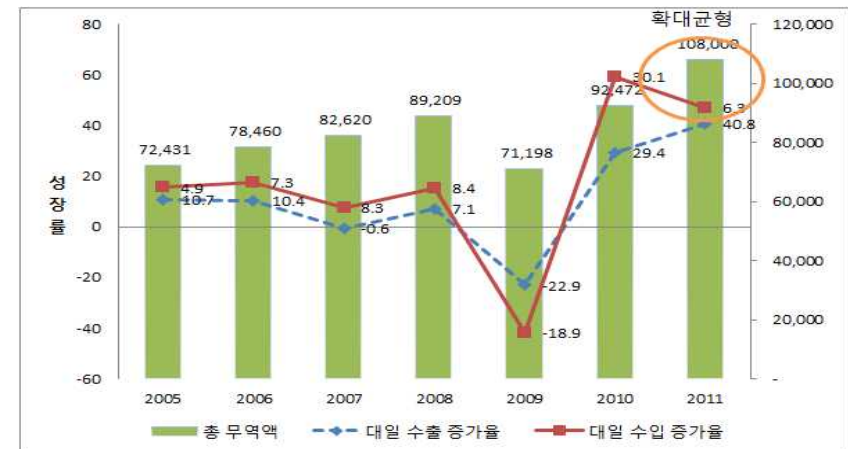
- JX닛코닛세키에너지와 SK종합화학('11.11), 미쓰비시화학·미쓰비시상사와 포스코켄텍('11.9)이 합작회사 설립 합의, 스미토모화학('11.5)은 약 190억 엔을 투자해 터치패널을 삼성에 공급

○ 한·일 무역의 ‘확대균형’의 조짐

- 2011년의 한일 간 무역 패턴은 탈동조화(Decoupling) 형태의 ‘확대 균형’ 조짐으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감소
- 전년 대비 대일 수입 6.2%, 대일 수출 40.8%, 총 무역액 16.8% 증가하여 전체 대일 무역적자 20.7% 감소에 기여하였음.
- 양국 간 확대균형의 주요 요인은 한국의 대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함.

【대일 수출 · 수입 증가율 및 총 무역액 추세】

(단위: %, 백만 달러)



-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임.
- 주요 요인은 부품소재 수입에 의한 것으로 전체 무역적자액 중 2010년 67.2%, 2011년 79.5%를 차지하여 국가적 과제로 지적
- 양국 간 상호 호혜적 확대균형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.

【대일 무역수지 개선방안】

- ▶ 한국의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노력
- ▶ 일본 부품소재 관련 기업의 한국 진출 가속화와 기술이전
- ▶ 그간 미흡했던 일본의 한국 부품소재 구매 확대

※ 최근 대지진 이후 일본 자동차업체의 ‘부품공통화 전략’ 추진으로 한국 부품 구매 확대 현상은 바람직한 방향

○ 3.11 동일본 지진 이후 일본경제 현황: Supply Chain 재구축 움직임

- 3.11 동일본 대지진과 태국 홍수 사태로 일본 제조업을 뒷받침해온 서플라이 체인에 큰 변화 경험
 - 핵심 부품소재 공급이 중단되면서 일본기업은 물론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임.
- 세계 산업계도 동일본 지진을 계기로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.
- 향후 일본의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전략은 리스크 분산을 위한

서플라이 체인 복선화와 생산거점 분산화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음.

- 이를 통해 해외이전에 따른 생산거점의 다변화와 현지조달체제인 지산지소(地産地消) 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임.
- 이는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음.

2. 효고현청 산업입지실

□ 방문일시 : 9. 26일(수) 10:00~12:00

□ 면담자 : Shiba Kazuki

□ 주요 면담내용

○ 공장 신증설 현황 개요: 공장 신·증설 건수 전국 최고 수준

- 2011년 효고현 내 공장입지 건수는 56건으로 47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으며, 이 중 공장 신설은 41건('10년 30건), 증설은 15건('10년 14건)임.
- 동년 공장입지 면적은 64.0ha로 전국 2위로, 이 중 공장 신설은 53.9ha('10년 22.7ha), 증설은 10.0ha('10년 17.5ha)의 규모임.
- 효고현 내 공장입지 건수 추이는, 2008-2010년 전반기까지는 경기부진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, 2010년 하반기부터 공장입지 건수는 증가추세로 전환

【효고현 내 산업단지별 공장 신증설 입지 현황】

산업단지명	공장 신증설(건수)	부지면적(m2)
神戸複合産業団地	7	48,598
二見臨海工業団地	3	5,803
神戸하이테크파크	2	25,132
포트아이랜드第2期	2	93,392
효고情報公園都市	2	47,639
三方東部工業団地	2	7,160
神戸空港島	1	7,348
神戸리서치파크	1	8,187
六甲아일랜드産業基盤用地	1	16,424
尼崎코스모工業団地	1	1,350
尼崎臨海地區	1	2,494
鳴尾浜産業団地	1	14,045
北攝三田테크노파크	1	20,986
高砂工業公園	1	4,013
三木工場公園	1	7,213
加西東産業団地	1	12,349
효고東條뉴타운인터파크	1	16,933
豊富団地	1	9,904
廣畑臨海産業団地	1	7,170
播磨科學公園都市	1	14,296
青垣工業団地	1	6,392
津名生穂地區産業用地	1	50,505
합 계	34	427,333

- 2011년 총 56건의 공지입지건수 중에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은 34건으로 전년의 19건에 비해 179%가 증가함.

- 효고현 내에는 총 28개의 산업단지가 존재하나, 2011년에는 22개 산업단지에 34개 기업이 신증설되었으며, 부지면적은 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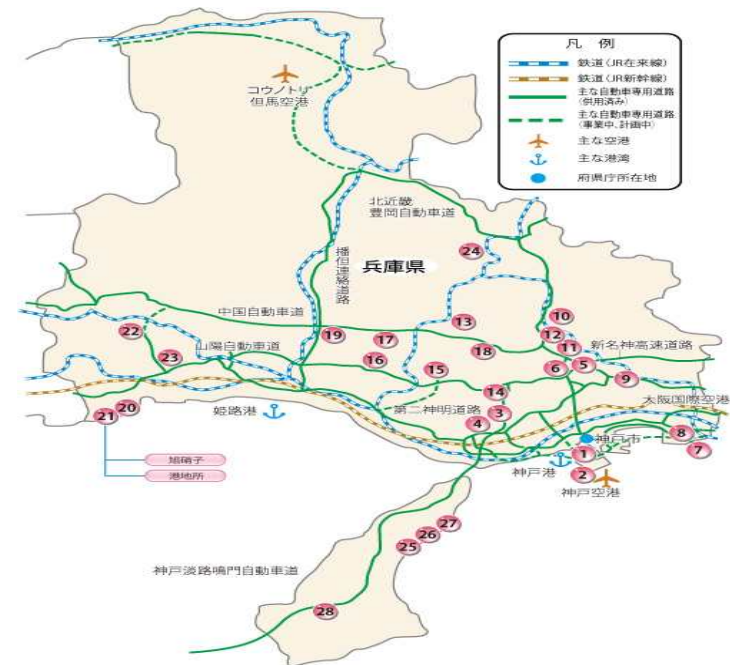
427,333m²임.

· 이 중 최근에 조성된 코베복합산업단지의 기업 입지가 7건으로 가장 많음.

- 총 34건 중, 공장 신설이 26건, 증설이 8건으로 타 지역으로부터의 기업유치가 많은 편임.

- 신증설 기업의 업종은 금속제조업 10건, 음식료 6건, 플라스틱제조업 5건 등

【효고현 내 산업단지 분포】



○ 산업입지촉진제도에 의한 입주기업 지원제도

- 효고현이 산업단지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래의 경제특구 구분에 의해 다소 상이함.
- ‘산업집적조례’에 의한 거점지구 구분은 표와 같이 5개로 나누어짐.

【산업입지 촉진제도 개요】

구분	①	②	③	④	⑤
	신산업창조 거점지구	국제경제 거점지구	산업집적 촉진지구	산업활력 재생지구	구조개혁 특별지구
조성 목적	클러스터 촉진	국제경제 교류 촉진	산업단지 활성화		규제완화 지원

-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크게, 세제, 보조금, 융자 등으로 구분됨.

<세제상 지원>

- 2억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1/2로 경감해 주는 ‘부동산 취득세 불균일 과세’를 적용하고 있음(①-⑤ 공통 적용)
- 단, ① 및 ③-⑤의 거점지구인 경우는 토지, 건물이 대상이나 ②는 건물만 적용함.

<보조금: 신사업 및 고용창출형산업 집적촉진 보조금>

▶ 설비기준

(설비투자 지원)

- 설비투자 보조금 비중은 3% 이내에서 지원

- 보조금 지원 요건: 첨단기술형 업종과 관련성있는 설비투자액이 20억엔 이상일 경우로 한 장

(연구개발형 설비 기준)

- 보조금 비중은 3%이내이며, 투자액이 10억 엔 이상일 경우 지원 (①의 거점지구만 적용)
- 보조금 비중은 3%이내이며, 투자액이 5억 엔 이상일 경우 지원 (③의 거점지구만 적용)
- 단, ②, ④, ⑤ 거점지구는 해당사항 없음.

(에너지 설비 지원)

- 태양광발전, 산업용자가발전, 산업용축전지 등에 대해 총 지출의 1/2을 지원하나 한도액은 3억 엔임(①-⑤ 공통 적용).
- 지원 요건은 투자금액이 5,000만 엔 이상인 경우

▶ 고용 기준

- 신규지역 고용자에 대한 보조는 30만엔/1인(①-⑤ 공통 적용)
- 지원 대상은, 신규 고용 11명 이상, 토지 취득 또는 임차인 경우는 설비투자 5,000만 엔 이상인 경우이며, 한도액은 3억 엔임.

▶ 임대료 보조

- 임대료 보조금은 상기 ①-③ 지구에만 적용되며, 아래 표와 같이 지원되고 있음.

	① 지구	② 지구	③ 지구
보조율	1/2 이내		
보조금	1,500/m2, 월		
한도액	200만엔/년		
기간	3년 이내		

<용자: (①-⑤ 공통 적용)>

- 이자율 1%/년, 한도액은 25억 엔, 기간 15년 이내
- 구성 요건은 지역 고용자 11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함.

3. 간세이가쿠인대학

□ 방문일시 : 9. 26일(수) 15:00~16:30

□ 면담자 : Ito Shoichi 교수

□ 주요 면담내용

○ 일본 기업의 한국이전 가능성(긍정적 측면)

- 일본 국내에서는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해 국내고용 감소, 기술이전에 따른 일본기업 경쟁력 약화, 산업공동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
- 그러나 최근 일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,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, 대지진 이후 전력문제, 엔고, 저렴한 노동력 확보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은 향후에도 가속화될 전망이다.

- 일본기업의 해외이전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, 한국은 일본기업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임.
- 일본기업이 한국이전을 긍정으로 보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향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.

- ① 첫째, 한국 노동력의 수준높은 기술력으로 기술집약형산업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임.
 - 최근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중 일본국내로의 'U-턴 현상'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 같은 결과는 기술수준에 기인하는 것임.
- ② 둘째,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전기요금과 법인세가 일본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임.
 - 특히, 3.11 동일본지진 이후 일본은 산업전력조차 부족한 상황으로 기업들이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음.
 - 법인세의 경우, 지방세를 포함한 한국의 법인세율은 24.2%임에 비해 일본 법인세율은 40.6%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실정
- ③ 삼성, LG와 같은 한국의 글로벌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이 용하다는 점
 - 최근 일본의 소니 등과 같은 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몰락을 겪으면서, 일본의 부품소재 관련 중소(중견)기업들은 완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한국의 글로벌기업과의 연계를 희망하고 있음.
- ④ 일본기업이 중요시 여기는 JIT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임.

- 일본기업은 과잉공급과 재고를 줄이기 위해 과거부터 적재적소 방식의 Just in Time 생산을 선호해 왔으며(대표적 기업은 토요타 자동차), 한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워 이 같은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.

【일본기업의 한국 이전 가능성(긍정적 측면)】

- ▶ 수준 높은 노동력으로 인한 기술집약형산업 진출 여건 구비
- ▶ 일본의 절반에 불과한 값싼 전기요금과 법인세
- ▶ 부품소재 분야에서 한국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가능성 증대
- ▶ 지리적으로 가까워 일본기업이 중요시 여기는 JIT(Just in Time) 생산이 가능

4. 교토시청 산업진흥실

□ 방문일시 : 9. 27일(목) 10:00~11:30

□ 면담자 : Nakatani Yoshiyuki, Nishimura Akira

□ 주요 면담내용

○ 교토리서치파크(KRP) 개요

(설립배경)

- 모기업인 오사카가스가 기존의 석탄 중유공장을 폐쇄하면서 재활용 검토에 들어감.
-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, 교토처럼 풍부한 역사적 전통을 가진 대학도시 필라델피아의 '유니버시티 시티 사이언스 센터(UCSC)'를 모델로 해서 1989년 설립됨.

- 인근대학과 연계된 네트워크 집적형 클러스터로서 IT, BIO 중심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실험실 및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됨.

(입주기업 수)

- 현재 250여개사 입주한 상태임.
- 입주기간 :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,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경우 입주가능.
- 입주대상 : 6-10년차 Middle-stage 기업이 중심
- 운영사 : 오사카 가스(부지는 오사카시가 지원, 운영비는 오사카 가스 지원)

【KRP 입주기업 추이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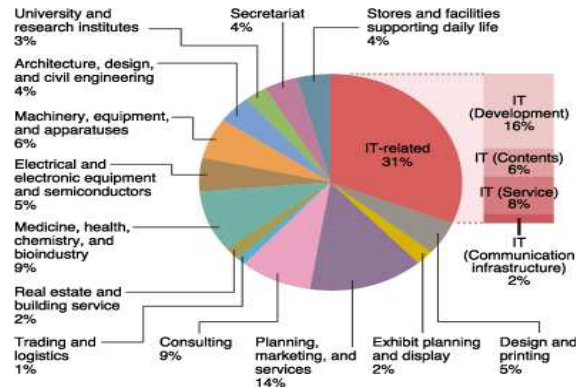


(입주기업 업종)

- IT를 비롯하여 화학, 바이오, 반도체등,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음.

- IT업종이 약 31.0%를 가장 많으며, 이 중에서도 IT개발이 16.0%, 콘텐츠개발 6.0%, IT서비스 8.0%를 차지하고 있음.
- 다음으로 기획, 서비스 분야가 14.0%, 컨설팅 9.0%, 전기, 전자, 반도체 업종이 5.0%를 차지함.
- 대학 및 연구기관도 3.0%를 차지

【KRP 입주기업 업종】



○ 주요 지원서비스

- ▶ 대중소기업 간 기술매칭 설명회 추진
- ▶ 사업계획서 타당성 지원
- ▶ 시장조사, 상담회 등의 마케팅, 기술개발 지원(Test를 위한 대학 연계)
- ▶ 보조금, 융자 등의 자금지원, 계약서, 특허 등의 법률지원
- ▶ 인재육성 및 교육 알선 등의 인력 지원

⇒ KRP 내에서의 창업은 전체 입주기업의 40%를 차지

5. 오사카부립대학

□ 방문일시 : 9. 27일(목) 16:00~18:30

□ 면담자 : Watanuki Shinichiro 교수

□ 주요 면담내용

○ 한일 FTA에 따른 일본기업 한국 진출 가능성

- 일본기업과 정부는 한국과 일본은 규모의 경제 달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 촉진, 제3국 시장에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 한일 FTA 추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.
- 그러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협상 전망은 밝지만은 않음. 한국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부문의 대일 무역역조 확대를 우려하고 있고, 일본은 농산물 시장의 수준 높은 자유화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.
- 즉, 한국의 대일 수출품목 중 무관세 비율이 70%에 이르는 반면, 일본의 대한국 수출품목 중 무관세 비율은 38%에 지나지 않음. 또한, 2010년 일본의 비농산물 가중 평균 관세율은 1% 미만이라는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
- 따라서, 한일 FTA가 양국 간 Win-Win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익의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함.
- 일본은 농산물 시장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철폐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, 한국은 관세 철폐에 따른 걱정보다는 기술력이 경쟁력을 결정하게 되는 부품소재 부문에 대해 일본과의

투자협력, 기술이전 등 포괄적인 산업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.

- 최근 일본기업이 한국 진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은, 한국은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가진 'FTA 허브 국가'로서 자리매김했으며 많은 일본기업들이 한국의 경제영토 활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됨.
- 즉, 2012년 5월 현재 미국, EU 등 8건의 FTA를 통해 총 45개 국가와 무역자유화를 실현하였으며, 7개 국가·지역과 타결했거나 협상 중에 있으며, 한중 FTA 협상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
- 이러한 여건 속에서 향후 일본이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, 한국은 일본의 세계시장 확대를 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- 특히, 일본기업은, 최근 한국은 많은 국가와의 FTA 체결로 인해 광활한 경제활동영역(FTA를 체결한 국가의 총 GDP는 세계 전체의 약 61%)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한국 기업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을 희망하고 있음.

○ 일본 기업의 한국이전에 대한 애로사항

- 일본기업이 한국 진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한 환경 개선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.
- 특히, 한국의 노사문화가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한국 진출을 꺼리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.

- 일본기업이 발명한 지적재산권을 보호, 강화하는 정책을 원하고 있음.
- 최근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 분쟁으로 인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.
- 한국 정부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을 희망하고 있을 것임.

【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애로사항(부정적 측면)】

- ▶ 한국 내에서 일본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기업 투자환경 개선
- ▶ 노사문화 선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
- ▶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
- ▶ 조세감면 등의 투자 인센티브 확충

6. (주) 다이로쿠

□ 방문일시 : 9. 28일(금) 10:00~11:30

□ 면담자 : Minoura Asamu 대표이사

□ 주요 면담내용

○ 회사 개요

- ▶ 1947년 창립되어 1974년 오사카 시내에 있는 Nanko 공업단지(산업단지)에 생산공장 입주
- ▶ 종업원 수: 85명
- ▶ 주요 생산품목: 건축물 금속자재
- ▶ 해외 생산공장: 베트남

○ 공업단지 내 인프라 재정비는 조합이 해결하는 구조

- 난코 공업단지는 40년 이상된 노후공업단지인 인프라의 재정비가 필요할 경우는 공업단지 내 조합이 해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.
- 즉, 공업단지 내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조합이 기금을 마련하여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있음.
- 이때,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일체 없으며 조합이 모든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임.
- 따라서 공업단지 내 인프라가 상당 부분 낙후될 경우, 많은 입주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.
- 그러나 과거 20-30년전과 비교하여 기업체 수에는 큰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.
 - 그 이유는 단지 내 분양가격이 싼 것에 기인함.
- 도로 확충 등의 공업단지 외부에 대한 인프라 재정비는 정부가 출연한 독립행정법인인 '도시재생기구'가 담당하고 있음.
- 도시재생기구의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대규모 토지이용계획 추진
 - 도시의 교류, 경제 거점 형성
 - 도시 밀집시가지 개선

○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은 연구개발 분야에 국한

-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연구개발 분야에 국한되어 있음.

- 중앙정부 및 오사카시가 주관하는 산학연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연구비를 받는 형식임.
- 그러나 Nanko 공업단지에 입주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영세 기업들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.
- 따라서 기업들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기보다는 재정 형편이 어려운 개별기업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세제상, 융자 등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많음.
- 과거 중앙 및 지방정부가 Nanko 공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 조합에 가입한 기업들이 상호 보증하는 '연대보증' 제도 확충으로 융자 지원을 한 적이 있음.
- 그러나 경기부진으로 도산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연대보증한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고
- 융자 지원을 한 은행권에서도 도산기업에 대한 책임을 연대보증한 기업에 물을 경우 연쇄도산을 우려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상환금 연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상황임.
- 따라서 최근에는 융자 등의 지원도 이러한 과거의 부작용으로 단절됨으로써 영세 기업들이 운영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나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음.